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그 추진 방향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

자료문의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재정위기로 인한 EU경제의 불안정은 일층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정을 흔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GATT 체제 하의 국제 분업 구조에 편입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요컨대 압도적인 경제대국인 미국시장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WTO 체제 발족 이후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시장 의존적 경제발전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게 미국시장을 위시한 구미시장은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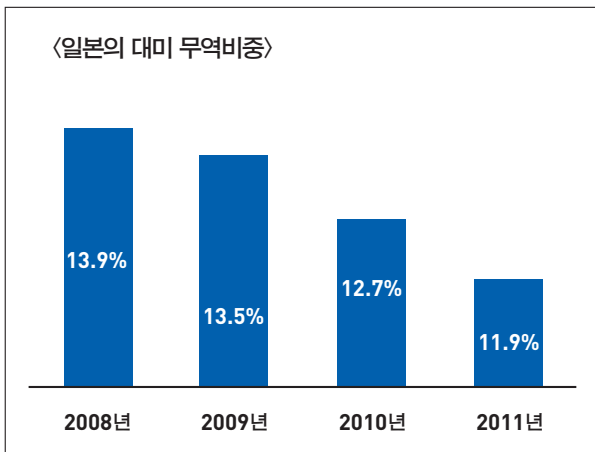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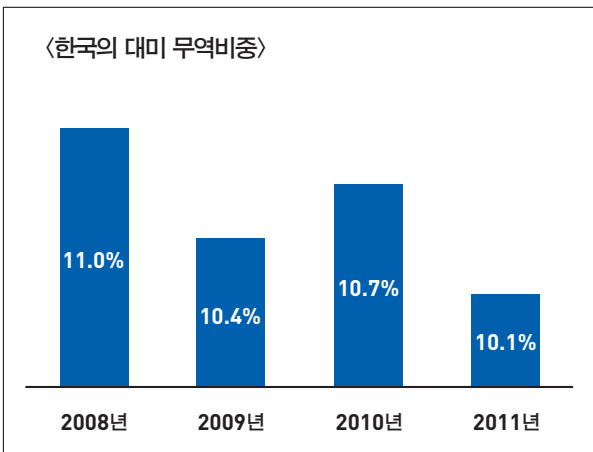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과 EU의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구미 경제가 더 이상은 수요처로서의 역할이 어려움을 명백히 드러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미시장 의존적 발전구조'를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무역 비중을 보면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EU 수출 증가율도 올해 1~4월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8.5%를 기록하였는데, IT와 선박을 중심으로 한 EU의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축소된 구미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바, 그 해결책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하겠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공동체 내 개별 가입국은 내수시장의 확대효과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는 등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체제가 기능을 발휘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공동체가 없는 관계로 항상 시장의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는데,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각개격 파당하는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한국 역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대가로 대량실업, 대량도산, 그리고 대규모의 국부 유출을 감수해야 했다.



1)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대EU수출부진 구조분석」2012.6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제도적으로 역내 무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역내 교역을 늘려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경제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역내 시장기구가 작동하고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시장기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어서 상호간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먼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양국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생산기지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다. 작년 3월 일본의 대지진은 일본의 생산기지를 리스크 분산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던졌다. 한국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 동향에 의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언제 파손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앞으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분산을 하여야 한다. 양국기업이 ‘한국과 일본’을 같은 시야에 넣고 산업기지를 건설하면, 한일 양국에 내재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생산기지 구축은 한일 간의 과잉생산 구조도 완화시키고 한일 간 협력의 강도를 지금보다 한층 높일 것이다.

둘째, 한·일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상호간 과당경쟁에 의한 출혈을 극복해야 할 환경에 놓여있다. 한·일은 그 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극히 유사한 경제구조를 형성하였고, 양국 모두 대외의존성이 강한 관계로 제3국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를 겪어왔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통해 양국 간 산업 내 분업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²⁾ 한일 간 산업 내 분업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한·일이 가진 기술·경영자원을 한일 간 산업 내 분업 부문에 보다 많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제3국에서의 한일 간 경쟁을 피하게 되고, 따라서 한일 간 과당경쟁에서 오는 한일상품의 교역조건 악화를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했고 일본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검토³⁾하고 있

2)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간 무역구조는 일견 분업구조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되어 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일본경제에의 의존도를 높여온 반면 일본의 한국경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

3)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을 정도로 국제 분업 구조 속에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경제는 무역의존도가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본경제는 강한 내부지향성, 내부조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방화에는 한계를 가진

는데,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 나아가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문제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자가 단지 자유시장 확대의 개념인데 비해 후자는 EU나 NAFTA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는 것은 한·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기지의 건설을 한·일을 시야에 같이 넣어서 설계하고, 역내 인적·물적 생산요소를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이 이러한 개념의 하나의 경제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FTA 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일 FTA 체결 시 지금 크게 존재하는 한국의 대일역조는 보다 확대될 것이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부품·소재기업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⁴⁾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의 경제권화가 갖는 이익을 한·일 양국이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경제권화를 위한 접근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일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접근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 작년 10월의 700억 규모의 한·일 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일 FTA 체결을 위한 한국 국민정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무한대로 하면 한·일 FTA 체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통화스와프를 무한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일본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 양국의 정책당국에 의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일을 시야에 넣은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다. 한·일 기업들이 리스크 분산을 포함한 시장적 합리성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체질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미·일 간 FTA 성격을 가지면서 전면적인 개방화를 야기하게 되는 TPP에의 참가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장과 원자재 수급에서 해외 의존 하는 일본 경제의 체질상 FTA 허브 역할을 해줄 한국경제와의 긴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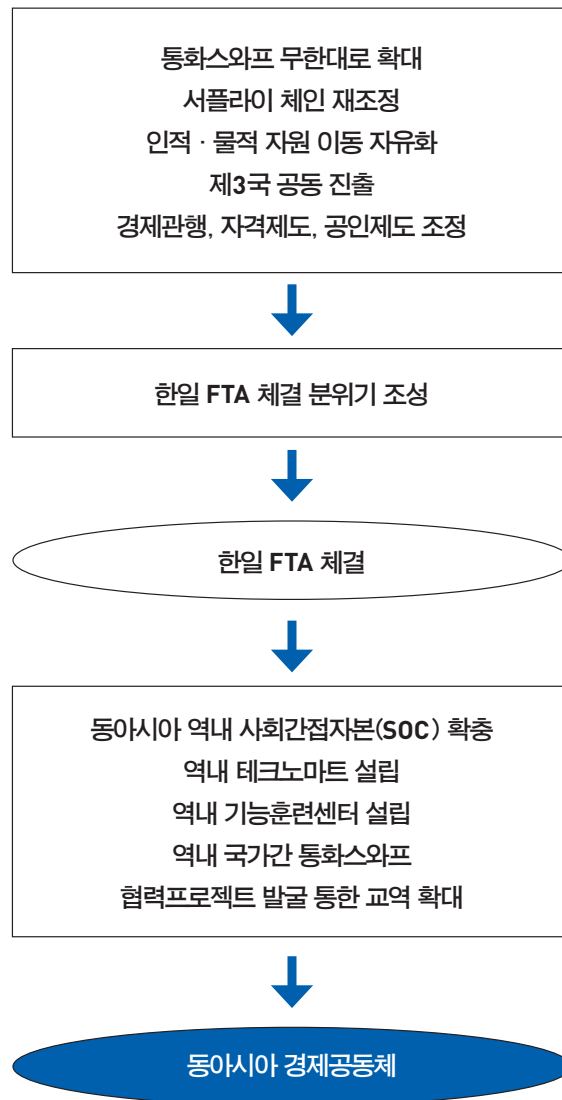
4) 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의 대일 수출은 FTA 체결 후에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대일 무역 역조만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주로 한국 측)와, FTA를 통해 유입된 일본의 기술과 제도가 오히려 한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결국은 일본기업에 의한 한국 제품의 구입증가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주로 일본 측)가 엇갈리고 있다.

에 입각하여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게 되면 그만큼 양국의 경제활동의 안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 한일 양국 기업이 각각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일 양국에 걸쳐 자유롭게 구입, 활용할 수 있으면 양국 기업이 보다 유리한 생산요소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양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그러한 활동의 연장으로서 첨단기술 개발과정을 한·일이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그것도 한·일의 우호분위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구입활동을 막는 장애요소를 찾아내어 이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증가시키면 그것도 한·일의 분위기를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 기업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이 확대되면 그것은 곧 대일무역 역조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한일 FTA 추진에 있어서 크게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의 작업들과 더불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양국이 가진 경제시스템, 경제관행, 그리고 자격제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경제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KS마크나 JS마크 등의 인정제도 제정에 있어서도 양국에서 공인제도를 확립하여 양국기업의 경제구조 속에 체계화시킬 수 있다면 양국의 공인제도 하에서 자유경쟁에 입각하여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 국제표준⁵⁾으로 될 가능성이 월등히 커질 것이다.

5) 어느 나라의 어느 제품이 국제 표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 기업의 제품이 국제 표준으로 한번 결정되면 다른 기업은 국제 표준이 된 제품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므로, 각국의 기업은 자사 제품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필사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내수시장의 크기인데, 내수시장, 혹은 준내수시장(지역단위 공동시장)이 크면 클수록 기술적 수준과 코스트경쟁력이 높아지므로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한일 FTA가 체결되어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고, 이 토대 위에서 한·일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면 한·일 경제는 그들이 투입한 코스트를 크게 상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⁶⁾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에서는 한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인구 1억8000만명, 세계 GDP의 약10%, 1인당 GDP 36,7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체제를 같이 하는 인접국가 중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하는 점에서도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화가 요구되고, 또한 한·일이 가진 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메리트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일 양국에 의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정부에 의한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기술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간다면 언젠가 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필자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69)
-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 박사 (1984)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984~2010)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1994~1996)
- 한일경상학회 회장 (1996~1998)
-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1998~1999)
- KT 경영고문 (2010~2011)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 (2011~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IGE MEMBERSHIP GUIDE

법인 회원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회원

- 1 구좌당 연 3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학생회원 (대학원 및 대학생)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